

5. 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95. 10. 21

제안자 : 조영길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5. 18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관련해서 8만 군민을 대표하는 화순군의회와 군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여 5. 18의 가해자를 가려내고 학살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5. 18 학살자 처벌을 이루지 못함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일로서
- 문민정부는 온 국민의 분노와 절기에 귀를 기울여야 함.
-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반역사적인 행위로
- 5. 18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3. 결의문 : 별첨

2. 주요 골자

- 5. 18 학살자 처분을 이루지 못함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로서
- 문민정부는 온 국민의 분노와 꺾기에 귀를 기울여야 함.
-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반역사적인 행위
- 5. 18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2. 결 의 문 : 별 첨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 공소권 없음 」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8만 군민을 대표하는 화순군의회 및 군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80년 불의와 맞서 싸우다 숨진 5월 영령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지금 아직도 5.18 학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역사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김영삼 정부가 온 국민의 분노와 절기를 외면한 채 「 성공한 구테타 」 운운하면서 학살자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려함은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위이며,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이 허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역사앞에 묻는다.

5.18 가해자는 누구이며, 단죄는 면죄될 수 있는가 ?

우리 화순군의회는 법의 정의를 무시한 검찰의 「 공소권 없음 」 결정이 반역사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5.18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 검사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들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투쟁해 나갈것을 거듭 다짐한다.

1995. 10. 31.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